

與 “금투세 폐지”, 野 “민생회복 지원금”

중도층 공약 ‘선심성공약’ 주의보

지역화폐 제도, 이재명 전매특허 특정 업종에 몰리는 부작용 논란 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강조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 물거품 폐지 시 세수 부족 상황 심화될 것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민생 회복’을 입모아 외치는 여야 정당들이 치밀한 설계 없이 대중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놓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공약은 중도층을 유인하거나 정치 저관여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민과 중산층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경제 활황을 예상했으나, 고금리와 고물가에 직면하며 소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정당들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포착하고 각종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24일) 1인당 25만원씩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공약해 논란이 됐다.

이 대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전국민에게 지급해, 내수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씩 약 5175만명의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고 전제해 약 13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 제도는 이재명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꾸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는 수조원의 경기도 예산을 지역화폐 사업에 사용한 바 있다. 지역화폐 예산은 골목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됐다는 시각도 있는 반면,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특정 업종에 몰려 모든 업종이 골고루 혜택을 입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도 생겼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유통업체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 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지역화폐가 흘러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선별적 복지’와 모든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복지’ 사이 이견도 아직 크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사실 포퓰리즘적 공약이다. (지역화폐 정책이)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데, 이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갈릴 것 같다”면서 “포퓰리즘이나 대표행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김해시 울하카페거리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발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이 자기 지지층은 결집을 했는데, 중산층 입장에서 이 공약을 어떻게 볼까가 총선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도 약속했던 금투세 폐지는 지난 2022년 양당 합의로 2년 유예되어 2025년에 실시되기로 했지만,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금융 고소득자를 위한 금투세 폐지론이 오히려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여연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을 내고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지난 10여 년의 금융소득 과세 합리화 논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지난해부터 빨간불이 켜진 세수 부족 상황도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 스피커 역할 부족 ‘우려’

野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전국 유세 與 물리적 한계… 여론조사 하락세 한 위원장 같은 인사 찾기도 어려워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원톱 선대위’ 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외에도 이해찬 전 대표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을 돌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홀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위원장의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현재 선대위에 합류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임공동선대위원장 3인은 전날(24일) 각자 전국으로 흩어져 유세를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서울에서, 이해찬 공동선대위원장은 충북,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경남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25일 경남지역을 돌고, 김 위원장은 부산을 돈다. 경남 지역은 이들 연속 민주당 선대위원장이 방문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했고, 오후에는 전국대의교수협의회(전교협) 측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갈등을 중재했다. 그런데 선대위 회의에 공동선대위원장이로서 참석한 이는 윤재옥 원내대표 뿐이었다. 안철수·원희룡·나경원 등 3명의 공동선대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했기에, 지역 일정이 많은 주말은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로 당내에서 ‘한동훈 원톱 선대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당초 안철수·원희룡·나경원 등 3인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 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아한 반응이 나왔다.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한 경기 분당갑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지만, 그래도 21대 총선에서는 보수정당이 접전 끝에 이기는 등 경합이 예상되는 곳이다. 나경원 위원장이 있는 서울 동작을 역시 ‘공중전’보다는 ‘지상전’이 필요하다.

원희룡 위원장 역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

구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했고, 해당 지역은 국민의힘에는 ‘헛지’다. 그러나 원 위원장은 특히 운선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으로서도 ‘오라는 곳은 많은데 물리적 한계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치는 것이다.

민주당의 상황은 다르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챙겨야 하고, 중간에 재판도 출석해야 한다. 그러니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선대위원장을 더 초빙하면, 이 대표가 다른 지역에 지원 유세를 갈 수도 있고 자신의 지역구에 집중하는 시간도 벌 수 있다. 각 후보자 캠프도 중앙당에서 선대위원장이 지원 유세를 받기는 입장이라, 선대위원장이 역할을 분담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또 이해찬·김부겸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도 하지 않으니, 일정을 운용하기 더 쉽다.

이에 여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선거지원과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은 3인 체제로 움직이는 것에 비해, 여권은 한 위원장 ‘1인 스피커’기 때문에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이날도 한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로서 서울에서 일정을 돌았으나,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 선거운동에 집중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 외 이같은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도 나오는데,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한 방송에서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니, 합류한다면 나온 모양새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유 전 의원은 일반적으로 정부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스타스에도 약간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을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맡은 것도 한 위원장 외 스피커를 늘리기 위한 측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므로, 인 위원장과 함께 국민의미래를 홍보할 수는 있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를 명시적으로 홍보할 수 없지만, 스피커의 역할을 나눠가질 수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낙동강 벨트 간 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시킬 것”

지역균형발전, 민주당 오랜 꿈尹 정부 후 좌초… 재추진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낙동강 벨트’로 내려가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부산과 경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곳을 말하는데, 이번 총선에서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와 경남도지사를 지낸 여당의 중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경남 양산시 을, 현역인 전재수 민주당 후보와 지역구를 옮겨 6선에 도전하는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하는 부산 북구갑 등에서 치열한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도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경남의 현실이 어떻나.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

속 빠져나간다”면서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온 민주당의 오랜 꿈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잘 추진되던 것이 이 정부 출범 이후에 좌초됐다. 그런데 좌초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이곳저곳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선거를 앞두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수도권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경남의 후보자들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를 언급하니, 정말 유권자인 이곳 주민

들을 혼란스럽다”며 “국민의힘이 좌초시킨 부울경 메가시티, 민주당이 자랑스러운 16분의 후보자와 함께 반드시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동회의 후 창원을 거쳐 낙동강 벨트인 경남 김해시로 자리를 옮긴 이 대표는 울하카페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나”라며 “건드는 것마다 다 망쳐놓는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다. 우리가 권력과 예산을 맡긴 이유는 다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충실하게 일하라는 것이었지, 언제 그렇게 뺨뺨이치고 무심하게 자기를 권력이나 누리라고 했나”라며 “국민의 삶에 관심이 없지 않나.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 맞나”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백태홍 기자

선관위, 선거보조금 총 508억 지급

민주당 188억, 국민의힘 177억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보조금 등 총 508억1300만원을 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받았다. 5~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 미래에는 총액의 5%를 배분했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

진 정당 중 진보당과 기후민생당은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선관위는 나머지 금액 절반은 의석수 비율로, 절반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 선거보조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142석의 더불어민주당은 188억여원, 101석의 국민의힘은 177억여원, 14석의 더불어민주당연합은 28억여원, 13석의 국민의미래는 28억여원, 6석의 정의당은 30억여원, 5석의 새로운미래는 26억여원, 4석의 개혁신당은 9000만원을 받았다. /백태홍 기자